

“정상회담에 묻힐라” 국회 일정 변경 요구

보수 2野, 대정부질문 등 남북회담과 겹쳐 연기 제안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서로 합의한 사항 지켜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 등 정기국회 일정이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과 겹치자 일정 연기를 제안했다. 국회의 질의에 응해야 할 정부 인사들이 답변에 소홀할 것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제안을 일축하고 나서 여야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족사적 대의가 중요한 만큼 현재 정기국회 일정을 다시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기국회에 가려 민족사적 대의가 빛을 발하지 못해서도 안 되고, 민족사적 대의에 가려 정기국회가 흐지부지 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과 장관 청문

회 일정이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겹친 만큼 다음주 일정만이라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정상회담에 매몰돼 정기국회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과 분리해서 정기국회 일정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욱 원내수석부대표도 “추석 이후에 다음 주에 일정이 잡힌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를 조정해야하지 않나 하는 입장”이라며 “이와 관련해 교섭단체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정부 측 인사들이 국내를 떠나게 되는 상황에서 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첫 주에 추가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다음 주 있을 국회 의사일정을 연기할 것을 원내대표 간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연기 제안을 거절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여야 간 문서로 합의한 걸 무시하는 사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합의해 사인한 것은 좀 지켜달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문제의 경우 정부에서 청문요청서를 보내면 15일 이내 진행하게 돼 있다”며 “요청서가 지난 4일에 정식 접수돼 오는 18일이 시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간사간 12일로 합의가 돼 있었다”며 “갑자기 원내지도부에서 합의를 파기하라고 해 18일 이내에 끝낼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 12일 또는 정상회담 출발 하루 전이라도 해달라고 사정했는데 (야당이) 안 받아줬다”며 “그러면서 한국당이 대정부질문을 끝낸 19일과 20일에 청문회를 하자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자신들이 주장해놓고 그걸 오늘 갑자기 민족사적 대의 때문에 바뀌야 한다는 걸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이것 (일정 연기)에 대해 절대 논의할 생각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대정부질문은 오는 13일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14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예정됐다.

또 19일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경동호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5명의 청문회가, 20일에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각각 열릴 예정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바른미래-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공동 행동 협약

바른미래당과 전국 570여 개 노동·시민 단체의 연대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2일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협약식을 열고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장벽을 깨기 위한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등 3대 의제 아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 예산 증액 없는 의석수 확대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여성 대표성 확대, 정당 설립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 과제에서도 문제 의식을 함께 하기로 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우리나라 정치개혁은 크게 두 갈래로 이뤄져야 하는데 하나는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 대표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협의해 선거제도 개혁에 좀 더 힘을 싣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도 “이번 정기국회를 정치개혁의 마지막 기회로 놓고 각 당과 힘을 합쳐서 정치개혁을 이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또 정치편향 트집잡기

유남석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12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유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멤버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제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이 될 당시 이미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

했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력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특정 집단과 가깝다는 것 때문에 편향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편향된 시각을 가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후보자는 인사검증의 5대 기준을 무난히 통과

했고, 이번 청문 자료 검토 과정에서도 강화된 7대 검증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옹호했다.

한편,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석태·이은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보고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석태·이은에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했다. 대법원장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는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표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택지자료 유출’ 격돌

국토위, 현안질의·법안상정 순서 놓고 대립 끝 파행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정부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사전 공개 파문과 관련,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여야 간 대립 끝에 파행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신창현 의원의 자료 유출에 대한 현안 질의와 법안 상정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윤관석,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안전 순서에 합의하지 못했고, 결국 전체회의는 예정보다 1시간 넘긴 오전 11시에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회의가 시작됐지만, 여야 의원들이 수도권 신규 택지 자료 유출 의혹의 관련자 출석 문제 등을 놓고 고성을 주고 받으면서 20여분만에 회의는 중단됐다.

한국당은 ‘신창현 의원의 국가기밀 투기정보 불법 유출사건’으로 규정, 관련 질의를 법안 상정 전에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자료가 유출된 회의에 참석했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청 관계자 등 14명과 신의원이 자료를 받은 출처라 밝힌 과천시장을 출석시킬 것을 요구했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국회의원이 기밀자료를 유출해 해당 지역에 투기세력이 몰리는 등 시장 혼란이 발생했는데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익적인 일이라며 두둔했다”며 “이번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은 “자료유출과 관련해 국토부장관이 실상에 대해 먼저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신 의원의 자료 유출에 경솔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한국당이 법안심사를 뒤로 한채 정치공세만 벌이고 있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한국당이 원인을 밝히기보다 정치공세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임종석 의원은 “신 의원이 협의 중인 내용을 공개한 건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하다는 지적에 동의하지만, 한국당이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검찰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뜻이 아닌가”라며 “한국당이 법안 심사는 하지 않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계속되자, 같은 당 소속인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날뛰면 진행을 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결국 박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에게 안전 순서와 관련 증인 출석 문제를 재협의하라며 20여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당 “소득주도 성장 철회해야”

김성태 “일자리 효과 없어” 문재인 정부에 맹공

자유한국당은 12일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숫자가 가장 많은 통계청 발표가 나오자 “영터러 정책으로 인한 일자리 재앙 수준”이라며 문재인정부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작년부터 50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고도 불과 3000명 일자리로 마무리된 데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루빨리 소득주도성장을 철회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친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취업자 증가 폭은 겨우 3000명으로, 7~8월을 합쳐도 1만명도 채 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를 살릴 해법은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을 올리고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일자리는 썰물처럼 사라지고 소

득분배도 악화됐다”며 “고용 동향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왔다고 또다시 통계청장을 경질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국무조정실장 출신의 추경호 의원은 “일자리 재앙 수준이다.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 참모들이 영터러 정책으로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권이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제시한 ‘토지공개념’의 실질화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와서 토지공개념 개념을 들고나온 것은 부동산 안정을 가져가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정권의 정략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일면”이라며 “다음 주에 의원총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관련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은 이번 주 안에 성장 담론을 제시하기로 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무안 기업도시보다
부동산 투자 가치가 훨씬 높은 곳!!

개발 공사가 진행중인 광주인접 국가산단에
투자하거나 공동중개 하실분 상담환영!!

(주)가은중개법인
062-225-0312

